

# 민주 원내대표 경선 윤호중-박완주 '2파전'

## 안규백 불출마 선언... 16일 경선 윤 "저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 박 "당·청 민심에 더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경선은 윤호중-박완주 의원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출마가 예상됐던 안규백 의원은 12일 당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저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며 오는 1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

를 공식 선언했다. 이해찬계 친문으로 분류되는 4선의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174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나 검찰개혁 등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대

해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좀 더 세심하게 국민 공감대 속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도 이날 "변화와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4·7 재보선에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민심이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당 주도의 실질적 당정권 관계를 정립하겠다. 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며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가 반영된 당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당과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당정청협력이 민심에 부합했는지, 당내협력은 충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일각의 '친문 2선 후퇴론'에 대해선 "(선거 패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면서 "저는 친문이다. 후퇴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주장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이날 불출마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말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당원동지들과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민주당의 신뢰 회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복 출신으로 정세균계 마형으로 불리는 안 의원은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원내대표로서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4월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와 전체 의원의 의지를 모아주길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13일에는 코로나19 방역 간담회를 열어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한다. 14일에는 4·7 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부산에서 현장 회의를 열어 지역 민심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더민초)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모임 결정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초선의원 전당대회 출마 하겠다" 민주 초선그룹 세력화

### '더민초' 운영위 구성 논의

### 14~15일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재보선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의 세력화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운영위 구성을 논의했다. 더민초에는 초선의원 8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다.

운영위는 1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영인 의원이 운영위원장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인 지난 9일 상경례 성격의 첫 회

의에 이어 곧바로 정례회에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한준호 의원은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당 쇄신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체계를 갖춰 당 혁신과 소통 구조를 만들고, 전당대회 때에도 초선들이 출마하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민초는 오는 14~15일쯤에는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초선들은 이런 의견 개진 움직임이 내용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장철민 의원은 "반성하는 진의가 상실되고, 당내 갈등에만 주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조국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반성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지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전영우 의원은 재보선 패배에 대해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강성 당원도 당연히 당원이지만,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함께 규합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9일 첫 모임에서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지도부 선거에 나오면 대선에서 필패한다", "검찰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민생에 소홀했다", "청와대의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고 쓴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친문계 강성 당원들은 '문자폭탄'을 포함해 거센 항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순대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호려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권리당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민 이재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가치 비율이 60대 1"이라며 "대의원의 의사가 과다 대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친문 포진' 권리당원 비중 ↓ 경선룰 수정론 고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국민과 일반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45%), 권리당원(40%), 국민(10%), 일반 당원(5%)으로 구성된 다. 권리당원은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일반당

원과 달리 강성 친문 지지층이 포진해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성우 대변인은 12일 전준위 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국민과 일반당원의 목소리가 높고, 이번 전당대회가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수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 민주, 이해충돌방지법 4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책의 일환인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비대위가 반성과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 말했다. 이어 "4월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와 전체 의원의 의지를 모아주길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13일에는 코로나19 방역 간담회를 열어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한다. 14일에는 4·7 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부산에서 현장 회의를 열어 지역 민심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여의도 브리핑

## 이형석 "여론조사기관 재등록 금지기간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12일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현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여론조사 영업을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화여론조사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 김희재 "공직자 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12일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미

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하며,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 수기동 제일OP

- ▶ 20층 중 8층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매매 - 1억1000만원
- ▶ 20층 중 20층
- 계약 252㎡, 전용면적 142㎡
- 매매 - 3억3천만원

※ 사무실 전용, 코너, 주차 편리 문의. 010-3605-5000